

중국의 기여입학제 ‘自費生制度’의 어제와 오늘

최 영 표

동신대 중국어학과 교수



1. 본 글에 앞서

중국은 사회주의 국가이다. 따라서 정치적으로는 공산당 1당 독재체제를 견지하고, 경제적으로는 폐쇄적인 계획경제 체제를 기조로 하여 왔다. 그러나 이 체제로는 도저히 물질적인 토대를 다져 이상적인 공산주의 국가로 발전될 수 없다는 역사적 경험으로 1970년대 후반 개혁·개방 정책을 천명한 이래 점진적으로 자본주의 경제체제를 도입하게 되었다.

이와 같은 자본주의 경제체제를 도입하기 위한 이론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1987

년에는 소위 ‘사회주의 초급단계론’이라는 과도기 이론을 제시하였다. 이는 사회주의 국가 수립후 100년간은 물질적 토대를 마련하는 단계로서 우선 경제부흥을 이룩하여야 할 시기라는 것이다. 중국은 1949년 건국후 수차의 시행착오적인 곡절을 겪어 오늘에 이르고 있는데, 현재가 바로 이 초급단계에 속하기 때문에 사회주의 이념을 우선하는 것보다는 공산주의를 발전시키기 위한 물질적 토대, 즉 경제부흥을 이룩하는데 중점을 두어야 한다는 논지이다.

이러한 이론의 뒷받침 아래 1989년에는 등소평이 처음으로 상품경제라는 용어를 사용한 바, “사회주의에도 상품경제가 있다.”고 하여 시장경제의 수용 기반을 조성한 후

1993년에는 역사적인 전환이라고 볼 수 있는 소위 '사회주의 시장경제'를 제안하게 되었다. 이 사회주의 시장경제란 용어는 정치적으로 사회주의를 견지하고 있는 중국이 처음으로 창조한 개념으로서 자본주의 사회의 시장경제와 같은 의미는 아니라고 하고 있다. 자본주의적 시장경제를 중국의 사회주의 체제에 창조적으로 적용한 개념이라고 볼 수 있는데, 명확한 정의를 하기는 어렵고 현재도 실험을 통해 계속 형성되어 가고 있는 과정이라는 것이다.

이와 같은 일련의 자본주의적 시장경제 요소를 중국의 사회주의 사회에 창조적으로 적용하게 되면서 대학생 모집에서도 새로운 自費生 제도를 도입하게 되었다. 이 용어는 과거의 公費生 제도에 대응한 용어로서 자기 부담에 의해 대학에 진학한다는 의미를 갖고 있다. 우리가 현재 논의하는 입학시에 일정의 기여금을 대학 당국에 기부한다는 개념과 일치하지는 않지만, 일체의 학비와 숙사비를 납부하지 않고 공부하는 공비생 제도를 견지해 온 중국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일종의 기여입학제도라고 볼 수 있다.

이 글에서는 먼저 自費生 제도 도입의 배경을 고찰한 후에 自費生 제도가 실제로 어떻게 운영되어 왔는지를 구체적으로 논의하고자 한다. 이어서 중국의 사회변화에 따라 향후 이 제도가 어떻게 변화되어 갈 것인지에 대한 전망을 논의하고,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제공하는 시사점을 제시하는 것으로 이 글을 맺고자 한다.

2. 自費生制度 도입의 배경

중국은 사회주의 체제를 견지해 온 관계

로 1949년 건국 이후 최근까지도 公費에 의해 교육하는 제도를 시행하여 왔었다. 대학에 입학한 후에 일체의 학비를 받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식비에 해당하는 경비를 助學金이라 하여 제공하였으며, 기숙사까지도 모든 재학생에게 제공하여 생활하도록 하였다. 방학을 제외하고는 입학시부터 졸업할 때까지 일체의 경비를 받지 않고 국가 사회 부담으로 학교 안에서 공부하고 거주하도록 하여 철저히 의도하는 공산주의적 인간을 길러내 고자 한 것이다. 이와 같은 교육체제는 공산주의 철학인 면비교육론, 정치우선론 그리고 집단주의론에 그 기반을 두고 있다.

이와 같이 국가 사회 부담으로 교육시키는 체제를 견지하여 옴으로써 교육에 대한 국가 사회의 부담이 막중하였을 뿐만 아니라 대학교육 기회를 확대하는 데도 어려움이 많았다. 최근까지도 고급중학교(우리의 고등학교에 해당) 졸업생의 약 5%만이 대학교육의 기회를 향유할 수 있었던 것이 이를 잘 보여주고 있다.

이와 같은 체제로서는 국가 경제 발전의 요구 그리고 고등교육 기회 확대 요청에 부응할 수 없게 되었다. 개혁·개방 이후 경제 발전을 지상과제로 삼고 있는 중국 정부로서는 경제발전의 요구에 부응하는 전문인재를 많이 길러내는 것이 필요하였지만, 그렇다고 막중한 교육비 투자의 부담을 감당하기도 어려운 상황이었다. 한편, 개혁·개방 이후 경제발전이 가속화되면서 대학의 유능한 인재들이 보수가 좋은 기업으로 빠져나가는 현상이 많아짐에 따라 어떻게든 대학의 경비를 확충하도록 하여 이들에 대한 대우를 개선시켜줄 수 있는 재정적 뒷받침을 해주는 것도 정부가 또한 해결해야 할 과제였다.

이에 중국 정부는 1978년 초 교육부와 국가계획위원회가 공비로 교육하는 정원 이외에, 학비를 받는 주독생(走讀生) 제도를 '조절성 계획'이라는 이름 아래 도입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 대학이 재정을 확충할 수 있도록 하고, 인민들의 고등교육 기회 확대 요구에도 부응하는 한편, 전문인재도 보다 많이 길러낼 수 있도록 하고자 하였다.

收費走讀生이라는 명칭은 '학비를 납부하며 대학의 기숙사에서 거주하지 않고 집에서 학교에 다니며 공부하는 학생'이라는 뜻으로 사용하기 시작한 용어로서, 실제로 이 조건으로 입학한 학생은 집에서 다니며 학비뿐만 아니라 생활비와 식비도 자신이 부담하고 의료비도 50%를 부담하도록 하였다. 또한 졸업 후에도 公費生과는 다르게 국가 사회가 취업처를 알선해주지 않고 학생 자신이 해결하도록 하였다.

自費生制度는 이처럼 초기에는 走讀生 제도에서 시작하여 발전한 제도로서, 주독생과는 입시에서의 커트라인과 학비납부 등에 있어 몇 가지 다른 특성을 띠고 있다. 먼저 입시 커트라인으로 보면, 주독생은 공비생, 즉 정식 합격생의 입시성적(高考成績)보다 약 10% 정도 낮은 점수대로 합격한 데 대해, 自費生은 이보다 더 낮은 약 20% 정도의 낮은 점수대에서 합격하는 경우가 많으나 매년 일정한 것은 아니다. 대학에 납부하는 학비는 自費生이 주독생보다 훨씬 더 많이 낸다. 이는 自費生의 합격 점수대가 낮기 때문에 대학 진학의 조건으로 납부금을 더 많이 내야 한다는 논리에 기반한 것으로 보인다.

3. 自費生制度의 실제

自費生 제도의 구체적인 실상을 이해하기 위하여 학생모집과정, 自費生 모집 비율, 自費生의 기여금액과 사용처 그리고 재학중 이들에 대한 대우와 졸업후의 취업조건 등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1) 自費生의 모집 절차

먼저 중국의 학생모집 제도를 보면 국가 계획의 측면에서 보면 크게 두 가지, 그리고 방법상으로는 세 가지로 구분된다. 국가 계획의 측면에서 보면 국가 계획에 의한 모집과 국가 계획외의 모집으로 구분되며, 방법상으로는 국가 계획외 모집이 다시 위탁 양성 모집 방식과 自費生 모집 방식으로 나누어져 앞서 국가 계획에 의한 모집 방식과 합쳐 세 가지가 된다. 국가 계획외의 모집은 앞의 조절성 계획에 의한 모집과 명칭만 다를 뿐 개념상으로 같다.

이 중에서 自費生 모집과정을 보면 정규 학생, 즉 공비생 모집과 몇 가지 다른 점이 있다. 중국의 대학입시¹⁾에 응시하여 시험보는 것은 똑같으나, 지원서 작성과 등록일시 그리고 학비 납부 등에서 다른 점이 있다. '중국의 대학입시는 5월부터 시작된다'고 볼 수 있다. 엄청난 수의 고등학교 졸업생이 대학에 진학하고자 하나 약 5~7% 수준의 진학률이 말해주듯이 대학의 문호는 좁아 대학 진학 희망자들을 모두 받아들이기가 어렵다. 그래서 성적이 좋지 못한 학

1) 통일고시라고 하는데 이는 전국의 입시생이 똑같은 날짜에 똑같은 문제로 시험보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다. 보통 고등교육 단계의 학교에 진학하는 시험이라 하여 高考라고 말한다.

생들을 일차로 걸러주는 한편, 자신의 입시 예상점수를 알고 합리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5월중에 1차 모의고사성 입시를 치른다. 이 모의고사는 7월중에 치르는 입시문제와 출제방식, 유형 및 난이도가 대체로 같게 출제한다.

이 모의고사성 점수가 6월 초순경에 발표되는데, 이 때의 점수가 지원에서 주요한 참고자료로 작용한다. 총점 620점 만점인데 대체로 400점을 넘지 못하면 지원을 못하게 된다. 지원자는 이 점수를 보고 지원을 하게 되는데 이때 제1지원, 제2지원, 제3지원 등의 난에 지원 대학명과 학부명을 적어 넣는다. 또한 自費生으로 진학하고자 하는 학생은 지원서 아래 부분의 自費生 난의 제1지원, 제2지원, 제3지원 등의 난에 위와 같은 방식으로 지원처를 적어 넣는다. 이 지원서는 학교와 省·市, 국가 기구에 설치되어 있는 대학입시 관리실(招生辦公室이라 함)로 보내져 정식 통일고시 성적에 따라 사정하고 합격 여부를 결정지며, 당락 여부를 통지할 때까지 계속 사용된다.

대학입시는 7월 초순에 치르게 되며 7월 20일 경에 대학별·학부별 커트라인이 발표된다. 응시생들은 이 커트라인과 자신의 점수를 비교해 보면 대개 합격 여부를 알게 된다. 입시관리실은 응시생이 지원한 순서대로 대학 학부별 커트라인과 대조하여 합격 여부를 결정한다. 응시생 개인의 합격 통지서는 대체로 7월 말경에 전달된다. 이 합격통지서를 삼연단(三連單)이라고 하는데 이는 입시관리실, 대학 당국, 입시생에게 전달되는 세 쪽의 분할된 통지서를 함께 합쳐 놓을 때 하나의 완전한 문서로서 기능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데서 유래한다. 이처럼 복잡하게 만든 것은 부정입학을 막기 위

한 것이라고 한다.

응시생이 합격 통지서를 대학관리실로부터 받은 후 합격한 대학에 등록하게 되는데, 등록시일은 自費生이 公費生보다 10일 정도 늦는 것이 관례이다. 이는 自費生 합격 발표가 공비생보다 늦은데다가 납부금 준비기간을 주기 위해서이다. 공비생은 대체로 8월 25일까지 등록하는데, 이들은 신분증과 합격통지서만 대학 당국에 가지고 가서 대학이 가지고 있는 삼연단의 일부분과 합쳐보는 것으로 확인되며, 일체의 학비와 숙식비도 납부하지 않는다. 그러나 自費生은 등록시 납부금과 숙식비를 내야 한다. 공비생보다 10일 정도 늦으니 대체로 9월 5일 무렵이 된다. 중국의 학년도가 정식으로 9월 1일부터 시작되므로 어느 때는 학기가 시작된 후가 될 때도 있다. 그러나 自費生까지 포함하여 입학식을 거행하도록 날짜를 조정하므로 별 문제는 없다.

2) 自費生의 모집 비율

自費生의 모집 비율은 대학별로 차이가 있다. 自費生 비율을 대학 임의로 정하는 것이 아니고 매년 상급 교육행정 당국이 배정한 숫자만큼만 모집하므로 일정하지가 않다. 물론 대학 당국도 협의 과정에서 의견을 제시한다. 自費生 모집 정원을 결정하는데 관련되는 요소로서는 해당 지역의 인력 수요, 당해 대학의 교학 여건 등이 주요하게 작용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필자가 1995년 동북사범대학의 객원교수로 재직중에 살펴본 바에 의하면, 自費生 비율은 20% 수준이었다. 이 대학은 국가중점대학으로서 중국의 동북지역에서는 제일 유명한 사범대학인데, 공비생 입학정원이 약 2,000명이었으며 自費生은 약 400명이었다.

3) 自費生의 기여금액 수준

이들 自費生의 조건으로 입학한 학생들은 매학기 상당액의 학비를 대학 당국에 납부한다. 학기당 학비를 보면, 1987년에는 이 공계열이 중국 인민폐로 1,800원~2,000원 수준이었고, 인문사회계열은 이보다 낮은 1,200원~1,500원 정도이었다. 그러나 최근 들어 중국의 경제가 고도 성장함에 따라 통화팽창으로 물가가 상당히 오르게 되어 1990년대 초반에는 自費生 납부금도 상당히 올랐다. 이 기간의 自費生 납부금은 이 공계열이 중국 인민폐로 2,500원~3,000원 수준이 되었고, 인문사회계열은 2,000원~2,500원으로 높아져 부담이 커졌다.

이 금액은 중국의 보통 수준 가정으로 보면 상당한 액수이다. 최근까지 중국 인민폐 1원이 우리의 100원에 상당하여 한 학기당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약 250,000원 정도를 납부하는 셈이다. 이 액수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하찮을 수도 있지만, 중국인들의 생활로 보면 대단한 부담이라고 볼 수 있다. 일반 인민들의 월 보수가 우리 돈으로 약 50,000원이며 대학의 정교수 봉급도 80,000원밖에 되지 않는다. 물론 중국은 가장이 혼자 버는 사회가 아니고, 부부가 함께 돈을 버는 사회이기에 어떻게 절약하면 가능하다고는 볼 수 있다. 이 외에도 自費生들은 거주 비용, 식사 비용, 잡비 그리고 의료비의 일부까지도 모두 자신이 부담하여야 하는 상황이다. 따라서 自費生으로 입학하여 공부하려면 재학중 아르바이트를 한다 하여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부모의 도움을 받지 않을 수 없다.

4) 自費生 기여금의 사용처

自費生들이 납부한 상당 금액의 학비, 잡

비는 모두 당해 대학의 예산에 포함되어 사용된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自費生을 모집할 수 있도록 허용한 배경 중의 하나가 빈약한 대학의 재정을 확충시켜 주도록 한 데 있기 때문에 당해 대학이 적절하게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 학교 건물 신축 건설비와 보수 유지비에 보태 쓸 수 있고, 강의 수당으로도 사용한다. 다시 말해 특별히 어느 부분에 써야 한다는 규정은 없어서 당해 대학의 실정에 따라 사용할 수 있는 것이다.

교원복지 향상 차원에서 지급하는 강의 수당은 自費生만을 대상으로 한 수업시에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공비생의 수업까지도 포함된다. 다만 自費生 수업시의 수당 액수가 조금 많을 뿐이다. 예컨대 공비생 1시간 수업시의 수당이 3~4년 전에 인민폐 3원이었는데 비해, 自費生 수업시에는 4원 50전을 지급하여 약 50%를 더 지급하였다.

강의 수당은 우리처럼 규정된 기본시수 초과분에 대해서만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강의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교수의 기본봉급 수준이 일반기업에 비해 상당히 낮을 뿐만 아니라 잡수입도 거의 없기 때문에 젊고 유능한 교수진들이 유망한 기업으로 빠져 나가는 현상이 비일비재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별도로 강의 수당을 지급함으로써 젊고 유능한 교수진이 빠져 나가는 현상을 완화하고 낮은 보수도 올려주기 위한 방편으로 모든 강의에 대해 수당을 지급하는 것이다. 이 강의 수당의 주요한 재원이 自費生들이 납부한 학비임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5) 自費生에 대한 대우

自費生에 대한 대우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국가 계획외 모집이기 때문에 상당히

개방적이다. 공비생과는 달리 집에서 학교에 다니도록 하고 있어 학교 기숙사에 거주할 의무가 없다. 또한 졸업후에도 국가가 취업처를 배정해 줄 의무를 지지 않는다. 자신이 원하는 기업에 자율적으로 응모하여 자유경쟁을 통해 취업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취업문제가 모두 자기의 책임인 것이다. 이에 대해 공비생은 과거에는 일련의 협의 과정을 거친 후 국가의 배정에 조건 없이 따라야 했지만, 최근에 들어서는 협의 과정을 거쳐 취업하고 있어 형식상으로 국가의 승인을 받는 경우가 보편화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학교 내에서의 自費生에 대한 대우는 공비생과 같은 경우도 있고, 특별대우를 받는 경우도 있다. 특정 학부에 입학한 自費生의 숫자가 많지 않은 경우는 공비생과 똑같이 같은 수업집단을 이루어 공부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그 숫자가 많은 경우는 공비생과는 달리 별도의 수업집단을 조직하여 다른 교육과정을 편성하여 특별히 가르치는 경우도 있다. 경제발전에 따라 수요가 많은 경제, 무역 부문은 모집도 많이 하고 별도의 집단을 조직하여 원하는 교육과정을 편성하여 가르치도록 하고 있다. 본인이 객원 교수로 재직시 만난 自費生班 교수진들도 이들이 기여금을 내고 입학한 자들이며 강의 수당도 보다 많이 받는 점을 감안하여 수업 연구를 더욱 충실히 하여 가르친다고 이야기한 기억이 새롭다.

自費生을 위한 교육과정, 특히 별도 수업 집단을 조직하여 가르치는 自費生班의 교육과정은 주로 실용적인 성격이 강하여, 우리의 전문대학 과정(專科라 함)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이들 自費生은 공비생과는 달리 상당의 납부금을 내고 다니므로 졸

업후 취업하여 응분의 보상을 받아야 한다는 인식이 강하다. 따라서 학문 지향적인 수업보다는 실용적인 과정, 다시 말하여 취업하여 곧바로 써먹을 수 있는 교육과정을 원하고 있다. 그리고 4년제 本科 과정보다는 짧은 시간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배워 활용할 수 있기를 원한다. 이러한 요구에 부응하여 自費生을 위한 과정은 2년제 전문대학 과정이 많고, 개설되어 있는 교육과정도 이론적인 것보다는 현장 적응력이 강한 실무 지향적인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다.

중국에서 自費生 과정으로 많이 개설하고 있는 과정은 경제발전에 따라 수요되는 경제관리, 무역 부문, 세무관리 부문, 비서업무 부문들이고, 기술발전에 따른 컴퓨터 부문도 인기가 있다. 또한 이들 부문의 교육과정에서도 이론적인 내용보다는 현장의 실무과정을 주로 다룬다. 예컨대, 역사학부의 공비생에게는 주로 역사학에 관련되는 이론 지향적인 과정을 편성하나, 自費生 과정은 지방지 편찬 실무, 역사자료 처리 업무를 위주로 편성하고 있다.

4. 향후 自費生制度的 전망

이와 같은 自費生 제도는 과도기적 성향을 띠고 있는 중국 사회에서 대학의 재정 확충, 긴급히 수요되는 인재의 양성, 그리고 고등교육 기회의 확대에 이바지한 점이 많다. 그러나 중국 교육의 이념에서 볼 때 그리고 사회정의 실현 측면 등에서 볼 때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으며, 실제로 사회적·교육적으로 적지 않은 역기능을 초래하고 있는 점도 있어 오래 전부터 개선하여야 할 것으로 지적되어 왔다. 중국 사회에서 지적

되고 있는 주요 문제점을 들면 아래의 몇 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

첫째, 두 가지 방법으로 학생을 모집하는 것이 교육의 기회균등 원칙이나 공정 경쟁의 원칙에서 볼 때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다. 自費生들은 입시성적이 낮아도 대학에 입학할 수 있는 데 대해, 입시성적이 自費生보다 높지만 재력이 부족한 학생들은 원하는 대학에 진학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그래서 自費生들에 대해 돈으로 접수를 사서 입학한 학생들이라고 비아냥대고 있다. 물론 自費生들은 정규 정원 내에서 뽑는 것이 아니라 정원 외로 선발하기 때문에 그리고 성적이 형편없이 낮은 것이 아니라 약간 낮은 것이기 때문에 하등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말할 수도 있다. 그러나 사회정서상으로 이를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특히 중국 사회가 우선하여 내세우는 사회주의 평등의 이념에도 어긋난다고 볼 수 있다.

둘째, 고등교육의 질을 제고하는 데 역행하고 있다는 비판이 많다. 신입생 선발의 기준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공비생과 自費生의 수준은 다를 수밖에 없다. 이처럼 성취 수준이 다른 학생들을 동시에 가르치자니 교수들의 어려움이 많을 뿐만 아니라 교육의 질까지도 저하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셋째, 건전한 교육과 사회 풍토를 심각하게 오염시키고 있으며, 인재 양성의 거시적인 조정이 어려워지고 있다는 지적이 많다. 대학사회가 自費生 제도를 도입하게 됨에 따라 교육도 돈이 지배하는 풍토로 뒤바뀌고 있다는 것이다. 대학은 갖가지 방법과 수단을 동원하여 自費生을 많이 모집하고 있으며, 사회 또한 갖가지 불공정한 수단을 통해 원하는 대학에 자녀를 편법으로 진학시키는 풍토가 만연되고 있다. 그리고 이러

한 풍토에 편승하여 사회는 이를 이용하여 뒷거래를 하는 등 좋지 않은 폐습이 생겨났다. 예컨대, 어떤 기업은 自費生의 일종으로 볼 수 있는 위탁양성제도를 빙자하여 점수가 낮은 고위 임직원의 자녀를 유명대학에 진학시키고 있어 기업의 돈을 유용하는 폐습도 발생하고 있다. 이 위탁양성제도는 기업이 필요로 하는 인재를 목적으로 형성해내기 위해 설치한 제도이다. 기업이 직접 돈을 내서 특정 학생의 납부금과 생활비를 대주고 졸업후 자기 기업에 와서 일정 기간 동안 복무하도록 하는 제도인데, 실제로는 필요하지도 않으면서 고위 임직원의 자녀를 진학시켜주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기업이 뒷돈을 받고 편법으로 명의만을 빌려주고 학부모가 실제로 대학 당국에 납부금을 내고 있는 현상도 많다고 한다.

한편, 일부 대학은 사회의 인력수요를 고려하지 않고 인기있는 自費生 과정을 편법으로 개설하여 운영함으로써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벌이에 열중하고 있다는 지적도 계속 제기되고 있다. 돈벌기붐(下海潮라고 함)이 강하게 불고 있고, 사회 기강도 상당히 해이해진 오늘의 사회에서 지성의 장인 대학도 예외는 아닌 것이다. 이러한 무계획적인 自費生 과정 남발로 인해 어느 부문 인력은 넘치는가 하면, 어느 부문은 모자라는 등 인력수요와 공급이 일치되지 못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인력의 수요와 공급의 조절은 국가가 거시적으로 조정하여 왔는데, 自費生 과정의 편법 개설로 인하여 거시적인 조정이 상당히 어려워지고 있는 것이다. 우리가 볼 때는 그간의 폐쇄적인 중국 사회가 개방적인 체제로 전환되는 상황이기에 과도기적으로 갖가지 폐해도 나타나고 낭비현상도 나타나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자동적으로 조절되게 되므로 그리 큰 문제는 아니라고 간과할 수도 있다. 하지만 국가 계획 체제를 기반으로 삼고 있는 사회주의 중국의 눈으로 보면, 이러한 수급 불균형 현상의 야기는 조정력의 상실로 여겨지고 있으며 통치권의 누수로까지 받아들여질 수 있는 문제이다.

이러한 여러 문제가 야기됨에 따라 중국 정부는 대학생 모집 방식을 특수한 예외를 제외하고는 한 가지 방식으로 단순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아왔다. 단, 과거의 국가 사회 부담으로 교육하는 공비생 제도로 돌아가는 것은 바람직하지도 않고 비현실적이므로 수익자 부담의 원칙을 적용하는 방향으로 개혁하고자 하고 있다. 보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自費生 제도인 국가 계획외 모집 방식을 폐지하여 국가 계획에 의한 모집 방식만을 두고, 입학사정 기준도 한 가지로 하여 모든 학생들에게 일정의 학비를 납부하는 제도로 개혁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이다. 학비 납부 측면으로 보면, 공비생 제도가 폐지되고 自費生 제도로 통합된다고도 볼 수 있지만, 그렇다고 지금까지 시행해온 自費生제도로의 통합은 아니라고 분명히 말할 수 있다.

이와 같은 개혁은 중국 사회가 시장경제 체제를 받아들인 후 지속적인 고도 성장으로 인민의 생활 수준도 대폭 향상되어 어느 정도의 학비를 감당할 만큼 되었으며, 현실적으로 대학교육은 의무교육이 아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수익자 부담의 원칙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호응이 확산되었기 때문이다.

정부의 학생모집 방식의 개혁 방침은 1993년에 발표한 ‘중국교육개혁과 발전 강

요’ 라는 문서에 명확히 제시되고 있다. “국가 계획에 의한 학생모집(國家 任務計劃이라 함)과 계획외 학생모집(調節性 計劃)에 의한 두 가지 방식을 공존시켜 왔는데, 적지 않은 문제가 야기되고 있어 1994년도부터 몇몇 대학들이 국가 계획에 의한 한 가지 방식으로 통합 모집하는 것을 실험하고, 1997년 9월부터는 이를 전국에 보편화한다. 즉, 조절성 계획에 의한 학생모집을 실시하지 않고 대학생은 납부금을 내고 공부하도록 하며 졸업후에는 일정 범위 내에서 스스로 직장을 선택하도록 한다.”라고 하여 수익자 부담, 自費生 제도의 폐지, 그리고 자율적인 취업을 기초로 하여 개혁하겠다는 뜻을 천명하였다.

이러한 방침에 따라 1994년에는 39개 대학이 개혁 방침에 따라 국가 계획에 의한 학생모집을 실험하게 되었으며, 1995년에는 이러한 대학이 245개교로, 그리고 1996년에는 더욱 확대되어 660개 대학으로 늘어나게 되었다. 그리고 1997년 9월부터는 농업, 사범, 체육, 항해, 민족 부문의 대학을 제외한 모든 대학이 정부의 개혁 방침에 따르도록 하고 있다.

이와 같은 개혁 방침에 따라 중국 정부는 한 가지 방식으로 학생을 모집하도록 단계적으로 유도하면서 납부금 기준도 함께 제시하였다. 1993년에는 매 학년도당 인민폐 500원~1,000원의 범위에서, 1994년에는 1,000원~1,400원의 범위 내에서 학비를 거둘 수 있도록 하였다. 구체적인 학비 납부 상황을 보면 북경의 청화대학은 1994년도에 국가가 제시한 기준에 따라 학비, 잡비, 기숙사비를 포함하여 인민폐로 1,000원을 납부하도록 하였으며, 경제발전 지역인 광둥과 상해 지역의 일부 대학들은 약 2,

000원까지 납부하도록 한 경우도 있다.

1997년도 북경 지역의 대학들은 개별 학생별로 인민폐 2,000원 이상을 부과하기로 잠정 합의하고 있는 상황인데, 일반적으로 볼 때 지역과 계열에 따라 학비 수준은 상당히 다른 실정이다. 예컨대, 길림 예술대학은 1년에 인민폐 5,000원~6,000원 사이에서 학비를 부과할 예정이며, 동북사범대학은 학부 또는 전공별로 다르게 부과할 예정이다. 문과와 이과는 학비를 받지 않고 외국어학부, 예술학부, 체육학부 등의 비사범 계열은 학비를 부과할 계획이다. 그리고 영어, 러시아어, 일본어, 컴퓨터, 체육 전공 학생은 1년에 1,500원을, 국민경제관리, 도서관학, 전자·자료학, 생물기술도시계획, 환경학, 운동 훈련, 법학 전공자에게는 2,300원을 부과할 계획이다. 특히 음악교육, 미술교육 전공 학생들은 4,000원을, 그리고 컴퓨터 미술 설계 전공자들은 제일 많은 4,500원을 납부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와 같은 학비 납부 기준은 대체로 양성 원가를 계산한 후 국가가 규정한 25%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중국의 사회 상황을 감안하여 결정한 것이라고 책임있는 관리는 얘기하고 있다.

한편, 기존의 自費生 제도를 폐지하여 국가 계획에 의한 학생모집 방식을 보편화하고 원칙적으로 모든 학생들이 학비를 내고 대학에 다니도록 함과 아울러 보완 조치도 다양하게 마련하여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가정은 빈곤하나 능력있는 학생들은 학비 부담을 갖지 않고 공부할 수 있도록 각종 인센티브 제도를 개설하고 있다. 이와 같은 유인제도는 크게 네 가지를 들 수 있다. 장학금, 학비대여금, 근로 보조금, 그리고 극빈자 보조금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대학의

재정 상황에 따라 상당히 다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5. 우리에게 주는 시사

이제까지 중국의 기여입학제인 自費生 제도의 이모저모를 고찰하였다. 도입 배경부터 실시 과정 및 그간의 실시 상황을 요약하였으며, 최근에 이르러 自費生 제도를 폐지하고 수익자 부담의 방침에 따라 모든 학생이 학비를 내고 대학에 다니게 된 개혁의 실정을 소개하였다. 이는 사회주의 시장경제 체제로 이행하는 과정의 과도기적인 상황이라고 판단된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통해 볼 때 중국 사회가 정치적으로는 우리와 이념과 체제를 달리하고 있고 경제적인 수준이나 가치관도 달라 직접적인 시사는 주고 있지 못하지만, 우리가 기여입학제를 도입하는 데 반추해 볼 만한 논의 거리는 제공해 주고 있다.

첫째, 기여입학제는 교육기회의 균등 문제와 직결된 문제여서 사회가 이를 수용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이다. 중국의 自費生 제도도 정규 입학 정원외로 선발하고 있어 능력있는 공비생들에게 직접 피해를 주지 않는 범위에서 시행되었다. 그러나 어쨌든 성적이 낮은 학생이 기여금에 해당하는 학비를 내고 입학한 것이며, 결국 이들은 명문대학을 졸업하고 원하는 직장에 취업하기가 용이하다. 정규 학생들에게 직접 피해를 안 준다고 하지만, 비명문대학의 공비생들이 차지할 자리를 차지하게 되어 상대적으로는 피해를 주게 된다고 하겠다. 그렇지 않아도 개혁·개방 이후 빈부의 격차가 상당히 커지고 있어서 상대적 박탈감이 심화되

고 있는 처지인데, 교육 부문까지 돈이 있으면 성적이 뒤져도 좋은 대학에 진학할 수 있는 풍조로 바뀐 데 대한 불만감이 팽배할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우리 사회에서도 기여금 입학 문제가 계속 거론되면서도 쉽사리 결론을 짓지 못하고 있는데, 중국의 自費生 제도는 타산지석으로 삼을 만하다. 기여입학제도를 합리적인 방법으로 제도화한다면 여러 모로 도움이 되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평등의식이 유달리 높을 뿐만 아니라 교육열도 뜨거운 우리 사회가 교육의 기회 균등과 배치되는 기여입학제를 수용하는 데는 여전히 한계가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

둘째, 기여입학제는 학벌사회의 특성이 강한 우리 사회에서 교육적·사회적으로 나타날 후유증을 충분히 감당해낼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문제와 연관되어 있다.

중국이나 우리나라 학벌의식이 뿌리 박혀 있는 사회구조이다. 있는 자의 철학인 기여입학제는 우수한 대학과 있는 자에게 혜택을 주는 제도이다. 이는 주로 비교적 성취 수준이 높으면서도 커트라인에 도달하지 못한 자들에게 유리할 것이다. 이들이 우수 명문대학으로 집중되면 하위 대학들은 상대적으로 성취 수준이 낮은 자들이 들어가게 되어 대학간 격차는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중국 사회에서도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이러한 현상들이 많이 지적되어 사회적으로 큰 문제로 부각되었다.

우리 사회가 이러한 교육적·사회적 후유증을 감당해낼 수 있을 것 같지 않다. 그렇

지 않아도 무한 경쟁의 시대에 지방 후발대학들은 앞으로 과연 생존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위기 의식에 휩싸여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어떠한 장치를 마련한다고 하여도 있는 자의 철학인 기여입학제를 도입한다는 것은 혜택을 별로 받지 못하게 될 후발 대학과 일반 시민들에게 쉽사리 수용되기 어려울 것으로 생각된다. ■

〈참고문헌〉

- 郭福昌 외, 『중국 교육개혁 발전론』, 북경: 교육과학 출판사, 1993.
- 杜玉波, “시장경제 조건하의 고등교육개혁”, 『중국 고등교육연구』, 제45호 ('94. 6), 17~19쪽.
- 朴基俊, 미발표원고, “학생 모집방식과 학비제도”, 1997.
- 王善萬, “시장경제·인재수요·고등교육체제”, 『북경사범대학 학보 사회과학판』(1993. 2), 19~25쪽.
- 중국 국무원, 『중국 교육개혁과 발전 綱要』, 1993년 2월 13일 공포.
- 崔榮杓, “중국 교육의 개혁동향과 전망”, 『공산권 교육의 과거·현재·미래 - 북한과 중국을 중심으로』, 한국교육개발원 연구자료 RM88-1, 115~144쪽.
- 崔榮杓 외, 『북한과 중국의 교육제도 비교 연구』, 한국교육개발원 연구보고 RR88-29.

최영표/대만 국립정치대학에서 교육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한국교육개발원 연구위원, 교육개혁심의회 상임 전문위원 등을 지내고, 현재 동신대 중국어학과 교수로 재직중이다. 공저로 『비교교육론』 등이 있고, “북한과 중국의 교육제도 비교 연구”, “중국 교육의 개혁 실상과 과제”, “중국 교육의 개혁 배경과 논리 전개” 외 다수의 논문을 발표했다.